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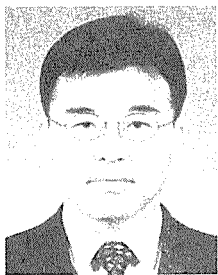
부품·소재 육성은 생존과제다

올 대일무역적자가 18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의 주된 요인은 바로 부품·소재의 지나친 대일 수입의존 때문이다.

21세기 산업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 중심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완제품 생산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품·소재는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품·소재는 또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커 산업 전반의 활력과 성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 산업의 발전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제다. 특히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하는 것은 동북아 산업지도에서 너트크래커(nut-cracker) 신세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 국운 융성의 길을 밟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화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 무역의 아킬레스건인 대일 역조는 부품·소재 발전 없이는 해소될 수 없다. 올 대일무역적자가 18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의 주된 요인은 바로 부품·소재의 지나친 대일 수입 의존 때문이다. 한국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다. 이는 한마디로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일 종속관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나타내는 중국(홍콩 포함)에 대해서는 부품·소재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다.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고질적인 대일 적자를 해소하고 중국에 대한 흑자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중국은 상당수 완제품의 경쟁력이 이미 우리를 추월했거나 바짝 추격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도 컴퓨터·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부품·소재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므로 언제까지나 한국의 부품산업이 중국의 그것을 앞선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간과 합동으로 부품·소재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보고대회를 잇따라 갖고, 특히 2010년까지 150여개의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매년 50개 이상의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MCT-2010'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부품산업이 5년, 10년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게 별로 없으며, 완제품 위주로 돼 있는 한국의 산업은 중국에 쉽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최근 오마에 겐이치 미국 UCLA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상태에 있는게 사실이다. 현재 설계기술, 응용기술 등 국내 부품·소재 관련 핵심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포함한 종합경쟁력은 85%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배가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부품·소재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요기업과 생산기업이 부품·소재를 공동개발하는 데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산·관·학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부품·소재 생산의 주역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겪는 기술인력난을 해소해 주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우리의 생존전략이므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특히 부품·소재 생산의 주역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겪는 기술인력난을 해소해 주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